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84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 의 자 : 유용원 · 강선영 · 성일종
김용태 · 임종득 · 박상웅
정성국 · 김 건 · 박수영
박정훈 · 조경태 · 한기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선행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군 및 관계 부처”를 “각군, 관계 부처 및 방산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의 분석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u>각군 및 관계 부처</u>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 략)</p>	<p>----- ----- ----- ----- -----.</p> <p>②----- ----- -----<u>각군, 관계 부처 및 방산업체</u>----- -----.</p> <p>③ <u>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의 분석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	--